멀쩡해도 50만원 주면 '장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복지혜택 노린 '가짜 장애인'·브로커 등 60명 적발

현직 교사·공사 직원·전문지 기자 등 포함

허술한 장애진단서 발급 절차를 악용해 멀쩡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둔갑시킨 브로커와 장애인을 자처한 '가짜 장애인'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을 노리고 '가짜 장애인'이 된 사람 중에는 현직 교사와 공사 직원, 전문지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정상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 박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44)씨 등 또다른 브로커 2명과 '대리 장애인' 11명, 의뢰인 42명, 소개자 3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해 3월 곽모(46)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장애인등록(6등급)을 해주는 등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2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의뢰인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장애 신청자가 제출한 장애진단서만 믿고 본인 확인 절차없이 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장애인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절차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도 범행 규모를 키운 요인이 됐다.

특히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자청한 사람 중에는 교사와 공사 직원, 기자, 자영업자, 주부 등이 포함됐다.

모 전문지 기자인 신모(52)씨는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장애등급을 5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고, 목포지역 고교 교사 이모(47)씨는 LPG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들 '가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건당 50만~250만원을 건넸으며, 대신 장애인 진단을 받은 '대리 장애인'들은 이 가운데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9월부터 '가짜 장애인'에 대한 적발에 나선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문영권 검사는 "이번 수사로 차량 등록과 취업 등의 혜택을 노린 '가짜 장애인'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장애인등록 절차 개선을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간첩누명' 김우철·이철 형제

35년 만에 사망 후 명예회복

광주고법 무죄 선고

군사독재 시절 경찰에 불법 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당한 고(故) 김우철·이철 형제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형제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김씨 형제를 불법 연행 및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 등을 통해 조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우철씨는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58세 때인 1975년 2월 고향인 강진을 찾았다가 지인의 거짓 신고로 인해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불법 연행된 뒤 간첩 누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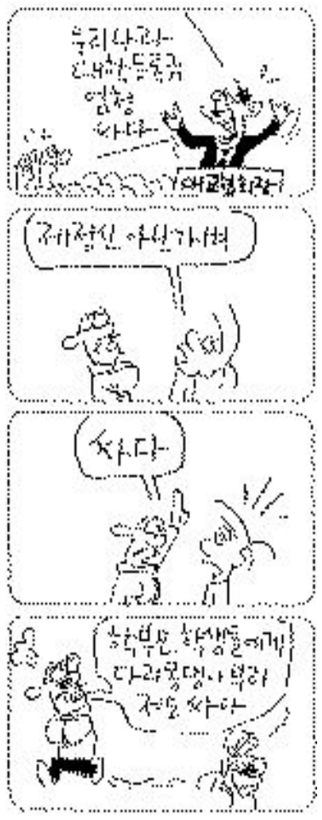
이들은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철씨는 징역 10년, 이철씨는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각각 1992년, 2002년 숨졌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와 동생 문영(70·경기도 고양시)씨의 재심 청구에 의해 누명을 벗게 됐다.

동생 문영씨는 "지난 30여년을 형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간첩 가족'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왔다"며 "이제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님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8017〉 김종두



허술한 등록증 발급·사후 관리

'가짜 장애인' 양산한다

당국의 허술한 장애인등록증 발급체계와 미흡한 사후관리가 '가짜 장애인'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등록은 신청자가 관할 동(洞)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는 신청인을 진단한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송부받아 장애유형과 등급 등을 확인한 뒤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장애인등록 신청서에 부착된 신청인의 사진 위에 동장 직인을 찍은 뒤 이를 들고 신청인이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장애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동 주민센터에 보낸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브로커에 의해 돈으로 매수된 실제 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가짜 장애인'의 사진만 오려붙인다면 사실상 허위발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한 사후관리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1~2년에 한 번꼴로 재판정을 받는 정신·심장·간질 장애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장애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유는 각종 복지 혜택 때문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 수당·의료비 지원·세금 감면·통행료 50% 할인·차량연료지원·전화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장애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신청 절차과정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문제 개선을 위해선 동사무소나 관계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장애진단 전문 기관으로 지정한 뒤 의사 3~4명으로 구성된 발급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도심 흉물' 쇼핑센터 철거 2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원 에벤에셀 쇼핑센터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철제 H빔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신원 에벤에셀 쇼핑센터는 부지 4만5천㎡에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로 착공됐으나 지난 1998년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뒤 10년이 넘도록 도심 흉물로 방치돼 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노당 투표사이트 수색 전교조·전공노 명단 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은 28일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를 압수수색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합원들이 당원에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투표 사이트에 대한 검증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측에서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소환조사 일정을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女 승객 살해·유기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8일 여자 승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장모(4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여승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카드에서 돈을 뽑아 사납금을 내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사회가 받은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일 새벽 1시께 목포시내에서 여승객 A(여·27)씨를 묶어 트렁크에 가둔 채 3시간가량 돌아다니면서 지갑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고속도로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997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경찰에서 "사납금을 못내 퇴사 위기에 놓이자 돈을 빼앗기 위해 승객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김양식용 염산 보관 40대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28일 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박모(46·무안군)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무안군 삼향면 인근 창고에 무기산 125통(2천500ℓ)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차량 동전통에 지문 남겨 절도 덜미

쌍나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차량 동전통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2개월 전 저지른 절도 행각이 추가로 들통.

○…28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4)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등학교 앞 길거리에 주차된 노모(54)씨의 영업용 택시 유리창을 깨고 6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쳐 달아난 혐의.

○…이씨는 내비게이션을 훔치면서 차량 동전통에 있던 동전까지 훔쳤는데, 경찰이 동전통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지문조회에 나선 결과 추가 범행이 발각.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동구 일대를 돌며 차량 내에서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